
정책참고자료

2019-24호



목 차



1 행정안전부

행안부, 포천, 인제, 철원, 고성 등 4개 접경지역에 LPG배관망 확충

- 내년부터 2년간 접경지역 LPG 배관망 확충에 83억원 투자 -

4

2 국민권익위원회

‘자녀 질병 치료로 결석’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 인정된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중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추가” 고용노동부에 권고 -

6

3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847곳 지원

- 2019년 대비 494억원 증액한 4,705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 -

9

4 교육부

2020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시작

- 취학대상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예비소집, 가정방문 등 실시 -

13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제품, 유아동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생활제품 7종, 유아동 시설 542곳, 생활환경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에서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16

6 문화체육관광부

경북·여수·정선·창원 지역관광발전지수 새롭게 1등급

- 광역 5곳, 기초 지자체 9곳 2019 관광발전지수(1등급)으로 선정 -

26

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주민 주도 농촌 신활력 거점 30개소 선정

32

8 환경부

무인비행선으로 산단 미세먼지 배출 촘촘히 살핀다.

- 1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무인비행선 활용하여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상세 감시-

————— 36

9 고용노동부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얼마일까?

-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

————— 40

10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사례를 한 눈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201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및 웹툰 제작 -

————— 45

11 국토교통부

안산, 울산, 완주·전주, 삼척 친환경

미래수소도시로 도약한다.

- '20년 상반기 기본설계 착수, '22년까지 수소도시 조성완료키로

————— 52

12 해양수산부

수산물 위생·안전 매뉴얼 만든다.

-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매뉴얼, 전통시장 수산물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

————— 57

행안부, 포천, 인제, 철원, 고성 등 4개 접경지역에 LPG배관망 확충

- 내년부터 2년간 접경지역 LPG 배관망 확충에 83억원 투자 -

-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239세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350세대), 철원군 철원읍(360세대), 고성군 현내면(132세대) 등 총 4개 접경지역에 LPG 배관망 확충 공사가 진행된다.
- LPG배관망 확충 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공급배관 등을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0월부터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가의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들 4개 시군을 ‘2020년 접경지역 LPG 배관망 확충 신규 사업지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행안부는 선정된 4개 시·군에 앞으로 2년간 총 83억 원(국비 66억, 지방비 17)을 투자할 계획으로, 1,081세대가 가스 공급 혜택을 받게 된다.
- 행안부는 철원, 인제, 양구, 화천, 옹진 등 5개 접경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0%(고성군은 3.1%)로 전국 평균 84%에 크게 못 미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18.3월 지자체 조사 기준) >

구분	전국 평균	인천		경기							강원					
		강화	옹진	연천	포천	파주	양주	김포	고양	동두천	철원	양구	화천	인제	고성	춘천
%	84	30.0	0.0	43.6	44.9	78.4	78.9	86.8	90.0	96.6	0.0	0.0	0.0	0.0	3.1	90.0

- 이들 지역은 주로 실내등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비해 39%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 행안부는 내년 예산 2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LPG배관망 확충’에 필요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연료비용이 도시가스 대비 109.0%로 줄어들어 약 25%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에너지별 가구당 사용 요금 비교('19.3월 기준) > (단위 : 원)

구분	도시가스	개선 전		개선 후	
		LPG용기	실내등유	마을단위	군단위
LNG대비 가격지수(%)	100.0	201.9	138.9	109.0	99.7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성, 도시가스 업체의 투자 기피 등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녀 질병 치료로 결석’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 인정된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원규정 중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추가’ 고용노동부에 권고 -

-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본인이 아닌 자녀의 질병 치료로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추가해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원까지 학원비의 20~95%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구직자)와 능력 개발(재직근로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제) 개요 >

• 지원대상

구직자	√ 여성가장 * 배우자×, 부모없거나 부양능력없는 미혼여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개월중 10일미만 근로 일용근로자 등 √ 2017년 219,244명(여 74.4%, 남 25.6%) 지원
재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에서 * 기간제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육아휴직자 등 √ 2017년 261,934명(여 64.7%, 남 35.3%) 지원

• 지원 내용 : 연 최대 200만원, 사실 학원비 20~95%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이수 조건 : 교육과정별 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해야 이수처리

※ 출석일수 부족 또는 부정출결 적발 시 지원금의 차감 또는 지원 중단

(출처: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자료 발췌)

고용노동부는 교육과정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 시 예외적 출석 인정 사유를 마련해 교육생들의 출결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외사유에는 본인 외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녀가 아플 경우 중도에 교육과정을 포기하거나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 >

- 결혼 : 본인/ 자녀의 결혼(각 5일/1일)
- 출산 : 배우자의 출산(5일)
- 질병·입원 : **본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입원 (소요시간, 소요일수)**
***교육과정별 총 훈련일수의 10% 이내에서 허용**
- 사망 : 사망자(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에 따라 차등 부여 (1~5일)
- 훈련·시험·공민권 등 : 예비군·민방위훈련·징병검사 등, 채용관련 시험응시, 선거·투표,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선수 참가 등 (소요시간, 소요일수)
- 휴가 : 6개월 이상 교육과정 참여자에 한하여 인정(월 1일)

(출처: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자료 발췌)

- 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로 제빵학원에서 훈련중인 엄마임.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3일 동안** 집에서 본인이 집에서 간호. 3일후 학원갔더니 모두 결석 처리됨. 아이가 또 아프면 그것도 결석 처리되고 학원 **출석일수 부족으로 3개월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판임.** 교육훈련 출결관리 시 **왜 아동 보육에 대한 불가피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라고도 애 낳으라고 하는지. (2019. 7.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는 자녀가 있는 교육훈련생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 보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배려정책 등을 고려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예외적 출석 인정 사유에 본인 외에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도 포함 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 및 재직 근로자들이 자녀 보육 부담을 덜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847곳 지원

- 2019년 대비 494억원 증액한 4,705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지난 10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 의결에 따라 2020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847곳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상 최종 선정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지난 9월 2020년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조기 선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예산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확정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제외하고, 2019년 대비 11.7%(494억원) 증액된 4,705억원 규모이다.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9월에 발표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2020년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 또는 운영되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온라인쇼핑 확대에 기인한 고객 감소에 대응해 역사·문화·관광 등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해 고객 유입을 촉진하는 **특성화시장 141곳** (293억원)을 육성한다.
- ②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포함한 낙후된 구도심 상권 전체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기존 선정지를 포함해 총 **13곳**(113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③ 젊은 고객 유입 촉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장·상권·고객

특성에 맞춘 혁신형 복합 청년몰 3곳을 포함해 청년상인 육성에 총 134억원을 투입한다.

- ④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년 대비 5천억원 증액한 2조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 ⑤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등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을 받는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60여곳(141억원)을 지원한다.
- ⑥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96곳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424억원을 지원한다.
- ⑦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전선 정비 40곳(60억원),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을 2만 3천여 점포(132억원)에 설치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 등 ‘1시장 1특색’을 발굴하고,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과 함께 왕홍과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조기 선정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집행 체계 확립과 함께 전통시장·상점가를 소비자가 즐겨 찾는 매력 있는 곳이 되도록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상점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예산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		▪ 부여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 경영현대화사업을 선택·운영	360곳 내외	14,142
전통시장홍보		▪ KBS 6시 내고향, 지역상품전시회 등 전통시장·상점가 매출·고객유입 홍보	-	3,990
온누리상품권 발행		▪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 발행으로 매출 기반 강화	2.5조원 발행	231,264
특성화시장 육성	지역선도	▪ 지역별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톨모델로 육성	신규2곳 계속2곳	2,000
	문화관광형	▪ 시장 특장점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	신규45곳 계속42곳	22,500
	첫걸음	▪ 특성화 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역량 (고객신뢰, 안전 등) 강화 지원	30곳 내외	4,789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운영 등으로 상권활성화 추진	13곳 (누계)	11,258
청년상인 육성	복합청년몰 조성	▪ 청년점포, 기반·편의시설 조성 후 예비 청년상인 창업, 마케팅 등을 패키지 지원	9곳 (신규 3, 계속 6)	6,000
	활성화 및 확장	▪ 청년몰 활성화(사후관리), 기반시설, 점포공간 확대 등 확장 지원	15곳 (활성화 9, 확장 8)	5,350
	청년상인 도약지원	▪ 청년상인 점포환경 개선, 교육·컨설팅 등 자생력 강화(가업승계 포함) 지원	200명	2,000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화재알림시설설치	▪ 개별점포에서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자동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23,527점포	13,175
	화재공제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운영을 통해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	25천건	990
	안전점검	▪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562곳	3,243
	노후전선정비	▪ 개별점포 내 노후 전기시설 개선(배선, 콘센트, 분전반 등)	40곳	6,000
조사 및 평가		▪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의 실태 전반을 파악 하는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	700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 사회복무요원 배치로 전통시장·상점가 질서유지, 화재예방 등을 지원	105명	71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건립	▪ 공영주차장 설치, 개보수 지원	96곳 (건립 83, 개보수 13)	141,173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공공·사설 주차장을 사용 비용 및 운영비 지원	27곳	1,200

2020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시작

- 취학대상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예비소집, 가정방문 등 실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 우선, 이를 위해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며, 올해부터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와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예비소집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다.
 - 아울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가정방문·학교등교 요청 등이 진행되며,
-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2020학년도 시도별 주요 예비소집 일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월 8일(수)	1월 8일(수)	1월 3일(금) (추가: ~1월7일)	1월 3일(금)	1월 3일(금) 1월 6일(월)	1월 3일(금)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월 3일(금) 1월 10일(금)	2019년 12월 26일(목)	1월 3일(금)	1월 2일(목) ~1월 4일(토)	~1월 3일(금)	1월 3일(금)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월 2일(목) ~1월 6일(월)	1월 7일(화)	1월 6일(월)	~1월 10일(금)	~1월 8일(수)	
※ 학교별 예비소집 일자와 시간은 취학통지서에서 확인 필요					

-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할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그래서,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하여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유관기관에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13개 언어*)를 배포하여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한다.
-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타이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13개 언어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생활제품 유아동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생활제품 7종, 유아동 시설 542곳, 생활환경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에서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 및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 1~2 % 수준으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측정은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 7종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42곳, 다중이용시설(지하철·고속철도 역사, 공항, 공공놀이터·공원)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 생활환경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 생활제품 및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대상 >

구분	생활제품	유아동시설	다중이용시설	3.5 GHz 5G 기지국 설치지역
측정대상	7종	542곳	409곳	10곳

- 생활제품 측정은 지난 5월, 11월 두 차례 실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유아동·다중이용시설 측정 등은 지난 5~11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측정결과는 일반인·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와 '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 선정, 측정과정 및 결과 등을 검토하였다.

- 먼저, 국민신청(7~10월)을 통해 선정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대상 7종에 대하여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기준값) 대비 1~2 % 내외 수준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제품 (7종)	온열안대(1.48%), 온수매트(매트 위 : 0.17 %, 온도조절부 : 1.27 %), 정수기(0.18%), 세이펜(1.78%), 프린터기(0.27%), CCTV(0.17%), 가정용 태양광시설(2.8%)
--------------	---

- 이 중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온열안대, 온수매트 및 가정용 태양광 시설의 전자파 발생량은 다음과 같다.

- 온열안대의 전자파 노출량은 눈 부위 밀착 · 장시간 사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기준값 대비 1% 내외로 낮은 편이다.
- 온수매트의 경우, 매트 위에서는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값 대비 0.17 %인데, 이는 전기제품이 없는 일상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므로 실제 전자파 발생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온도조절부(온수순환 장치)에서는 30 cm 이격시 기준값 대비 1.27 %로 나타났으며 전자파가 발생하는 온도조절부는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면 전자파 노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 온도조절부에 완전 밀착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값 대비 20~30%로 나타나므로 전자파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사용 필요

-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모듈과 전기를 모아 전달하는 접속함, 그리고 교류전기(AC)로 변환하는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위치별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값 대비 최대 2.8%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의 교실, 복도, 놀이터 (운동장)에서 측정한 방송(TV), 4G, 5G(3.5 GHz 대역) 및 무선공유기

(와이 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무선공유기로 인한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0.2 ~ 0.3% 수준이나, 아동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교실, 복도)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한 268곳에 대해 KCA는 적절한 무선공유기 설치장소를 제시하거나 직접 설치장소 변경을 지원하는 등 전자파 낮춤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 유아동 시설 내 전자파 측정결과 >

구분	방송(TV)	4G(LTE)	5G(3.5 GHz)	와이 파이
교실	0.01~0.11%	0.01~0.26%	0.01~0.02%	0.01~0.20%
복도	0.01~0.11%	0.01~0.24%	0.01~0.02%	0.01~0.34%
놀이터(운동장)	0.01~0.19%	0.01~0.99%	0.01~0.07%	0.01~0.14%

-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대합실, 매표소, 승장장 등)의 TV방송, 4G, 5G(3.5GHz 대역) 및 공용 와이 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 보호기준 대비 1~2% 내외로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다.

< 일반인 다중이용시설 내 전자파 측정결과 >

구분	방송(TV)	4G(LTE)	5G(3.5 GHz)	공용 와이 파이
지하철 역사(89곳)	0.02~1.17%	0.01~2.68%	0.01~0.27%	0.01~0.81%
고속철도 역사(20곳)	0.01~0.97%	0.01~2.16%	0.01~0.49%	0.01~0.79%
공항(10곳)	0.02~0.37%	0.01~1.27%	0.01~0.21%	0.01~0.49%
공공놀이터·공원(290곳)	0.02~0.32%	0.01~0.61%	0.01~0.13%	0.01~0.15%

- 또한, 3.5GHz 대역 5G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주 간 변화가(강남대로 9.7 km 구간, 광화문 일대 5.4 km, 홍대입구 일대 4.5 km, 강남역)와 복합사무단지(월드컵북로 일대 5.5 km), 아파트 단지 등 10곳에서 5G 기지국(128국)이 눈으로 보이는 근접

장소 여러 지점을 선정하여 전자파를 측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5G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 보호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G는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반면 5G의 경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평균 전자파 노출은 4G 신호에 비해 낮을 수 있다.

< 주요 측정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

구분	4G(LTE)	5G(3.5 GHz)
강남대로	0.09~3.57%	0.10~1.39%
광화문대로	0.14~2.74%	0.06~1.13%
홍대입구 일대	0.10~3.30%	0.04~0.95%
강남역(내부)	0.05~2.59%	0.03~0.12%
복합사무단지	0.05~1.81%	0.05~0.82%
아파트 단지	0.08~1.17%	0.03~0.17%

※ 동일 장소에서 평일(10시~17시)과 이용량이 증가하는 금, 토요일(17시~21시) 모두 측정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www.rra.go.kr/emf)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 연구원의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	측정제품	주파수 성분	전자파 총 노출량[%]			측정거리	비고
1	세이펜	217 Hz	1.78			밀착	-
		254 Hz	1.20				-
2	온열안대	-	0.17			밀착	무선충전제품
		-	0.21				유선제품
		-	0.21				유선제품
		54, 68 Hz	1.48				무선충전제품
		39 Hz	1.12				유선제품
		-	0.21				유선제품
3	온수매트	60 Hz	0.17			30 cm	온도조절기 측정
			0.17				
			0.21				
			0.19				
			1.27				
			0.18				
4	정수기	60 Hz	0.19			30 cm	스탠드형
			0.17				일반 가정형
5	프린터기	60 Hz	0.18			30 cm	복합기
			0.27				프린터
6	CCTV	60 Hz	0.17			밀착	-
7	가정용 태양광 시설	60 Hz	태양광 모듈	접속함	인버터	30 cm	-
			0.63	0.76	0.94		
			1.55	2.8	1.06		

※ 전자파 노출량이 낮은 일부 제품들은 주파수 성분 확인 불가능

1 유아동 시설 전자파 측정결과

○ 측정기간 : 2019. 5. 1. ~ 11. 30.

○ 측정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542곳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합계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178	41	33	252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	55	10	5	70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경상)	123	4	3	130
전라권(광주, 전라)	49	4	7	60
강원권	-	11	9	20
제주권	10	-	-	10
합계	415	70	57	542

○ 측정장소 :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

○ 유아동 시설 내 이동통신 세부대역 측정결과

구분	주파수대역(MHz)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
방송(TV)	470 ~ 698	0.08~0.11%	0.08~0.11%	0.08~0.19%
	698 ~ 710	0.01~0.02%	0.01~0.02%	0.01~0.07%
	753 ~ 771	0.01~0.02%	0.01~0.02%	0.01~0.06%
LTE	864 ~ 869	0.01~0.02%	0.01~0.02%	0.01~0.05%
	874 ~ 884	0.01~0.24%	0.01~0.23%	0.01~0.87%
	884 ~ 894	0.01~0.26%	0.01~0.24%	0.02~0.89%
	949.3 ~	0.01~0.25%	0.01~0.22%	0.01~0.99%

구분	주파수대역(MHz)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
	959.3			
	1810 ~ 1830	0.01~0.14%	0.01~0.12%	0.01~0.60%
	1830 ~ 1860	0.01~0.15%	0.01~0.17%	0.01~0.76%
	1940 ~ 1950	< 0.01%	< 0.01%	< 0.01%
	2110 ~ 2130	0.01~0.06%	0.01~0.05%	0.01~0.19%
	2130 ~ 2140	0.01~0.05%	0.01~0.05%	0.01~0.13%
	2150 ~ 2160	0.01~0.03%	0.01~0.03%	0.01~0.06%
	2620 ~ 2640	0.01~0.07%	0.01~0.06%	0.01~0.25%
	2640 ~ 2660	0.01~0.08%	0.01~0.07%	0.01~0.34%
	2660 ~ 2670	0.01~0.04%	0.01~0.03%	0.01~0.12%
5G(3.5GHz)	3420 ~ 2500	0.01~0.02%	0.01~0.02%	0.01~0.04%
	3500 ~ 3600	0.01~0.02%	0.01~0.02%	0.01~0.04%
	3600 ~ 3700	0.01~0.02%	0.01~0.02%	0.01~0.07%
와이파이	2400 ~ 2483.5	0.01~0.20%	0.01~0.34%	0.01~0.14%
	5150 ~ 5250	0.02~0.04%	0.02~0.04%	0.02~0.04%
	5250 ~ 5350	0.02~0.03%	0.02~0.03%	0.02~0.04%
	5470 ~ 5650	0.04~0.05%	0.04~0.05%	0.04~0.06%
	5725 ~ 5825	0.03~0.06%	0.03~0.08%	0.04~0.07%

② 다중이용시설 전자파 측정결과

○ 측정기간 : 2019. 5. 1. ~ 11. 30.

○ 측정대상 : 지하철·KTX 역사, 공항, 공공놀이터 등 409곳

구분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	공원 놀이터·공원	합계
대상	89	20	10	290	409

○ 측정장소 : 일반인 이용장소(대합실, 승강장, 놀이시설 등)

		
< 기차 역사(승강장) >	< 공항 >	< 공원(전자파 시민참여단 참여) >

○ 지하철 역사 노선별 전자파 측정결과

구분		방송(TV)	4G(LTE)	5G(3.5 GHz)	공용 와이파이
서울	1호선	0.02~0.87%	0.03~2.54%	0.01~0.24%	0.02~0.51%
	2호선	0.02~1.01%	0.03~1.99%	0.02~0.27%	0.03~0.73%
	3호선	0.03~0.91%	0.03~2.16%	0.02~0.21%	0.04~0.56%
	4호선	0.08~1.17%	0.05~2.02%	0.06~0.22%	0.08~0.72%
	5호선	0.03~0.83%	0.04~2.33%	0.02~0.21%	0.03~0.61%
	6호선	0.03~0.37%	0.04~2.18%	0.02~0.26%	0.06~0.81%
	7호선	0.09~1.14%	0.07~2.51%	0.06~0.19%	0.08~0.63%
	8호선	0.09~0.81%	0.07~2.22%	0.06~0.18%	0.07~0.42%
	9호선	0.04~0.87%	0.05~2.79%	0.04~0.16%	0.06~0.63%
인천	1호선	0.02~0.36%	0.02~1.92%	0.01~0.11%	0.02~0.39%
	2호선	0.04~0.80%	0.03~2.68%	0.03~0.15%	0.05~0.56%
경기	공항철도	0.07~0.94%	0.03~2.68%	0.01~0.16%	0.03~0.48%
	분당선	0.02~0.88%	0.01~2.65%	0.01~0.18%	0.02~0.46%
	에버라인	0.15~0.80%	0.10~0.47%	0.12~0.18%	0.09~0.45%
부산	1호선	0.02~0.85%	0.03~1.99%	0.01~0.21%	0.01~0.75%
대구	1호선	0.02~0.27%	0.01~1.76%	0.01~0.09%	0.02~0.41%
대전	1호선	0.03~1.26%	0.04~1.73%	0.05~0.17%	0.05~0.61%
광주	1호선	0.02~0.42%	0.02~2.64%	0.01~0.07%	0.03~0.53%

○ 지하철 역사 내 주요 측정위치별 전자파 측정결과

구분	방송(TV)	4G(LTE)	5G(3.5 GHz)	공용 와이파이
대합실	0.02~0.82%	0.02~2.08%	0.01~0.27%	0.01~0.61%
매표소	0.02~0.48%	0.01~1.41%	0.01~0.17%	0.02~0.46%
개찰구	0.02~0.87%	0.03~2.11%	0.01~0.27%	0.03~0.68%
출입구	0.02~0.81%	0.03~1.71%	0.01~0.22%	0.02~0.61%
승강장	0.02~1.17%	0.04~2.68%	0.01~0.27%	0.01~0.63%
환승통로	0.02~0.50%	0.03~2.09%	0.01~0.21%	0.03~0.68%

○ 고속철도 역사 내 주요 측정위치별 전자파 측정결과

구분	방송(TV)	4G(LTE)	5G(3.5 GHz)	공용 와이파이
대합실	0.02~0.84%	0.01~1.84%	0.01~0.34%	0.01~0.76%
매표소	0.02~0.86%	0.01~2.16%	0.01~0.33%	0.03~0.69%
탑승구	0.02~0.48%	0.01~1.03%	0.01~0.10%	0.02~0.59%
출입구	0.02~0.54%	0.01~1.78%	0.01~0.27%	0.02~0.54%
승강장	0.01~0.97%	0.01~2.05%	0.01~0.33%	0.01~0.55%
역광장	0.02~0.56%	0.01~2.09%	0.02~0.49%	0.04~0.34%

○ 공항 내 주요 측정위치별 전자파 측정결과

구분	방송(TV)	4G(LTE)	5G(3.5 GHz)	공용 와이파이
대합실	0.02~0.33%	0.02~1.13%	0.01~0.21%	0.01~0.49%
수속장	0.02~0.26%	0.01~0.99%	0.01~0.11%	0.03~0.46%
탑승장	0.02~0.17%	0.01~0.29%	0.01~0.12%	0.02~0.15%
출입국장	0.02~0.37%	0.02~1.27%	0.02~0.15%	0.03~0.48%

③ 5G 기지국 설치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 측정기간 : 2019. 11. 15. ~ 11. 30.

○ 측정대상 : 5G(3.5 GHz 대역)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지역	지역유형	측정구간	측정기간 및 시간
강남대로	도심	9.7 km	11.14~11.16 10:00~21:00
광화문대로	도심	5.4 km	11.28~11.29 14:00~21:00
홍대입구	도심	4.5 km	11.28~11.30 10:00~21:00
월드컵북로	부도심(복합사무단지 1곳 포함)	5.5 km	11.26~11.27 10:00~18:00
지하철역	도심(강남역)	지하 내부	11.15~11.16 14:00~21:00
주거지역	부도심(아파트단지 5곳)	단지 내	11.19~11.20 10:00~18:00

○ 측정장소 : 5G 기지국 설치지역 인근 인도 등 일반인 이동구역

		
< 강남대로 >	< 광화문대로 >	< 아파트단지 >

○ 주요 측정지역별 4G/5G 기지국 신호 비교

구분	4G(LTE)	5G(3.5 GHz)
강남대로	0.09~3.57%	0.10~1.39%
광화문대로	0.14~2.74%	0.06~1.13%
홍대입구 일대	0.10~3.30%	0.04~0.95%
강남역(내부)	0.05~2.59%	0.03~0.12%
복합사무단지	0.05~1.81%	0.05~0.82%
아파트 단지	0.08~1.17%	0.03~0.17%

○ 측정지역 유형별 4G/5G 기지국 신호 비교

구분	4G(LTE)	5G(3.5 GHz)
도심	0.09~3.57%	0.06~1.39%
부도심	0.10~3.30%	0.04~0.95%
지하철	0.11~2.59%	0.03~0.12%
주거환경	0.08~1.17%	0.03~0.17%
사무환경	0.04~0.96%	0.03~0.82%

경북·여수·정선·창원 지역관광발전지수 새롭게 1등급

- 광역 5곳, 기초 지자체 9곳 2019 관광발전지역(1등급)으로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광역시 소재 군·구는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자가진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를 정확히 판단해보는 기초자료이다. 지역의 관광기반시설 여부, 관광객 수,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등을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4개 세부 지표로 구성해 평가한다.

올해는 강원, 제주, 전남, 경기, 경북 등 광역지자체 5곳과 평창, 여수, 정선, 경주, 순천, 울릉, 속초, 거제, 창원 등 기초지자체 9곳이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관광발전지역'(1등급)으로 선정됐다. 대분류별 1등급 지역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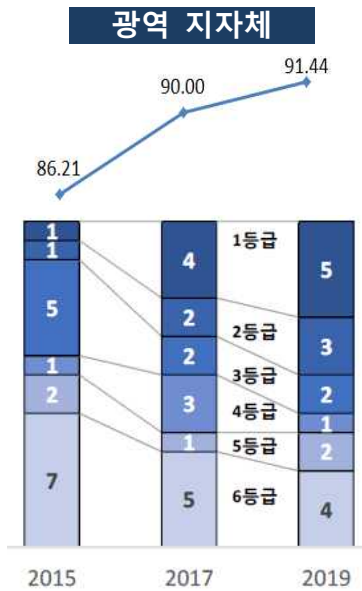
<지역관광발전지수 대분류별 1등급 지역>

구분	분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종합지수	지역관광발전지수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5)	거제시, 경주시, 속초시, 순천시, 여주시, 울릉군, 정선군, 창원시, 평창군(9)
대분류	관광수용력지수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울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8)	가평군, 강릉시, 거제시, 경주시, 공주시, 군산시, 김해시, 담양군, 무주군, 속초시, 수원시, 순천시, 아산시, 안동시, 양양군, 여주시, 여주시, 영월군, 용인시, 울릉군, 원주시, 인제군, 전주시, 정선군, 창원시, 청주시, 춘천시, 태안군, 평창군, 포항시, 홍천군(31)
	관광소비력지수	제주도(1)	울릉군(1)
	관광정책역량지수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9)	거제시, 고령군, 고성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남원시, 단양군, 담양군, 동해시, 목포시, 무주군, 삼척시, 서천군, 순창군, 안동시, 완도군, 울릉군, 인제군, 장흥군, 정선군, 제천시, 진도군, 창원시, 충주시, 평창군, 화천군(27)

특히 ▲ 경북은 관광교육 참여 확대와, 역사문화 자원 및 숙박 수용력 확충, ▲ 정선, 여수, 창원은 관광교육 참여 확대와 홍보정책 등 관광정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새롭게 1등급 지역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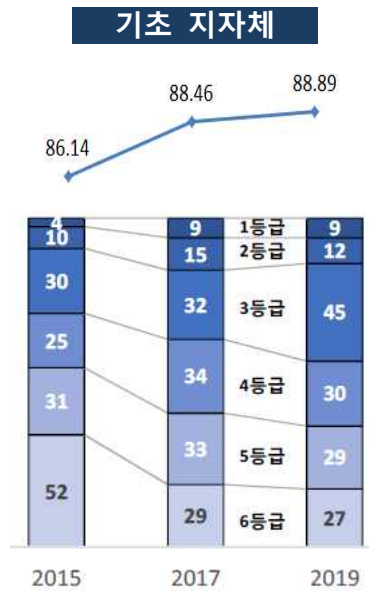
지역의 전반적인 관광 발전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

이번 결과를 2017년과 비교해보면 지역의 발전지수 평균은 광역지자체가 1.44%(90.00 → 91.44), 기초지자체가 0.43%(88.46 → 88.89) 높아졌다. 지역별 등급은 광역지자체가 17개 시도 중 7곳(41.2%)이 상승, 1곳(5.9%)이 하락했고, 기초지자체는 152개 시·군 중 47곳(30.9%)이 상승, 36곳(23.7%)이 하락해 전반적으로 관광발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수변동률**
: 3.0% ↑
* '15~'19 평균 상승률

■ **등급변화**
17개 시·도 중
7개(41.2%) 상승
1개(5.9%) 하락
9개(52.9%) 유지



■ **지수변동률**
: 1.6% ↑
* '15~'19 평균 상승률

■ **등급변화**
152개 시·군 중
47개(30.9%) 상승
36개(23.7%) 하락
69개(45.4%) 유지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TDSS)에서 시각화 자료 등 제공

이번 결과에 대한 시각화 자료와 분석 도구는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www.tdss.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1등급 지역 자료는 외부 공개, 2~6등급은 해당 지자체 관계자만 열람 가능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지역관광발전지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관광발전자문 및 조언(컨설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자체의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주요 결과
2.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지표 체계

1 조사 개요

- (사 업 명)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 (용역기간) '19. 4. 22.~ '20. 1. 16. (* 기준시점 : 2018년말)
- (조사대상) 17개 광역지자체 및 152개 기초지자체(광역시·도 소재 시·군)
-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역관광발전지수 개요 >

- ❖ (도입배경)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를 판단할 수 없어 체계적·효율적 관광정책 수립에 애로
 - 관광기반시설은 잘 갖춰졌는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지, 정책적 노력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
- ❖ (조사방법) ▲지역의 관광공급 능력, 관광소비 여건, 정책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복합지표로 구성(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정부승인통계 활용, 지자체 행정조사,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값 산출 (* 2015년도 최초 실시(2년 주기))
 -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관광발전지역'의 기준을 관광발전지수 100점으로 설정, 100점 이상 지역은 1등급, 100점 이하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은 상대적 발전정도에 따라 2~6등급으로 구분
 - 지자체별 점수 및 순위가 공개될 경우 서열화, 왜곡 해석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어 등급화하여 발표(광역·기초 별도 구분), 1등급만 외부공개, 2~6등급은 지자체 개별 통보

2 주요 결과

구분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152)		비고
	2017	2019	2017	2019	
1등급	4 강원, 경기 전남, 제주	5 강원, 제주, 전남, 경기, 경북	9 강릉, 거제, 경주 고성, 단양, 속초 순천, 울릉, 평창	9 평창, 여수, 정선, 경주, 순천, 울릉, 속초, 거제, 창원	
2등급	2	3	15	12	
3등급	2	2	32	45	
4등급	3	1	34	30	
5등급	1	2	33	29	
6등급	5	4	29	27	

* 광역자치단체 (17) : 등급 상승 7개, 등급 변동없음 9개, 등급 하락 1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152) : 등급 상승 47개, 등급 변동없음 69개, 등급 하락 36개 시·군

- (총괄) 전국단위 분석결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역관광발전
지수 평점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관광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 (광역 평균) ('15년) 86.21점 → ('17년) 90.00점 → ('19년) 91.44점
 - (기초 평균) ('15년) 86.14점 → ('17년) 88.46점 → ('19년) 88.89점
- (지자체 등급변화) 광역에서는 17개 지역 중 7개(41.29%) 지역,
기초에서는 152개 지역 중 47개(30.96%) 지역이 등급 상승
 - 광역은 경북, 기초는 정선, 여수, 창원이 1등급 지역에 신규 편입
 - * (등급상승요인) 경북은 관광교육 참여 확대, 역사문화자원 및 숙박수용력
확충 등이, 정선, 여수, 창원은 공통적으로 관광교육 참여 확대, 홍보정책
등 관광정책역량 요인이 등급 상승 견인

3 발전지수 주요 증감 요인

- 관광이용시설수 증가, 공무원·관광종사자 교육참여 확대 등이 지역
관광 발전을 견인한 반면, 관광만족도, 관광지출액 등은 하락
 - * 국내 여행경험있는 20대 이상 남녀 6,210명 대상 만족도, 지출액 등 설문조사 실시('19.8~10.)

구분	향상 지표	하락 지표
광역	관광교육(16.4%), 관광시설(11.0%), 관광활동여건(10.4%), 교통(7.4%), 관광객 수(4.6%)	홍보정책(-9.4%), 관광정책사업(-8.8%), 관광만족도(-5.9%), 관광지출액(-3.4%), 매체 홍보(-3.0%)
기초	관광시설(12.1%), 관광정책사업(11.5%), 안전(7.4%), 매체 홍보(5.1%), 관광교육(4.5%)	정책인력(-12.1%), 관광지출액(-7.6%), 관광만족도(-6.5%), 교통(-4.2%), 인구구조(-1.7%)

□ **지표체계** :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4개 세부지표

대분류(3)	중분류(7)	소분류(21)	세부지표(34)
관광 수용력 지수	관광 자원분포	자연생태자원	• 자연공원 면적, 자연휴양림 면적, 자연명승지 면적
		역사문화자원	• 문화재 수, 박물관 수
		관광(단)지	• 관광(단)지 면적
		관광시설	• 관광이용시설 수
		관광축제	• 관광축제 개최 일수, 스포츠 이벤트 개최 일수
	관광 인프라	숙박	• 일반숙박업 객실수, 관광숙박업 객실수, 관광숙박업 객실이용률
		안내	• 관광안내소 수, 관광안내인력 활동일수
		교통	• 시티투어 버스 운행횟수
		안전	•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5대 범죄발생 건수
관광 소비력 지수	지역 관광 효과	관광객 수	• 관광객 수
		관광만족도	• 관광만족도
		관광지출액	• 관광지출액
		관광산업	• 관광사업체 비율, 관광마을 매출액
	지역민 관광활력	인구구조	• 인구, 인구성장률
관광정책 역량지수	관광정책 환경	관광정책사업	• 관광개발 사업 건수, 관광 관련 조례제정 건수
		관광예산	• 재정자립도, 관광예산 비율
	인적 역량	정책인력	• 관광 공무원 비율,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이수비율
		관광교육	• 관광종사원 교육프로그램 예산비율
	지역 홍보	홍보정책	• 관광홍보행사참여건수
		매체홍보	• 보도자료 건수

□ **수집경로** : 정부승인통계, 행정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 수집

수집 경로	세부지표(34개)
정부승인통계 (20개 지표)	자연공원 면적, 자연휴양림 면적, 자연명승지 면적, 문화재 수, 박물관 수, 관광(단)지면적, 관광이용시설 수, 관광숙박업 객실 수, 교통사고발생건수, 5대 범죄발생 건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관광사업체 수, 관광숙박업 객실이용률, 인구, 인구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관광자원개발사업 건수, 관광조례 제정건수, 재정자립도, 관광예산액
행정조사 (12개 지표)	관광축제 개최 일수, 스포츠 이벤트 개최 일수, 일반숙박업 객실 수, 관광안내소 수, 관광안내인력 활동일수, 시티투어 버스 운행횟수, 관광마을 매출액, 관광 공무원 수, 공무원 관광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수, 관광종사원 교육프로그램 예산액, 관광홍보행사 참여 건수, 보도자료 건수
설문조사 (2개 지표)	관광만족도, 관광지출액

농식품부, 주민 주도 농촌 신활력 거점 30개소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대상 지구 30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 (추진경과) 예비계획 사전 설명회('19.7월) → 사업 설명회('19.9월) → 공모('19.9~11월) → 43개 시군 신청 → 시도 심사('19.12.2~12.5) → 농식품부 대면 심사(12.11~12.13) → 최종 30개소 선정

□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핵심사업으로

○ 향토자원 육성 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 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또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주민·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며,

- 지역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총사업비(70억원)의 30% 이상은 지역 혁신주체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S/W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아울러, 민간중심의 사업기획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활력 추진단’ 및 활동조직(액션그룹)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 사업의 지속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발굴에 적극적인 시군을 선정 시 우대하고 있다.

□ 이번 선정된 30개 시군은 2020.8월말까지 농식품부와 기본계획 협의, 추진단 확정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 2023년까지 시군별로 1년차 14억원, 2~3년차 각각 21억원, 4년차 14억원 총 70억원(국비 49, 지방비 21)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 농식품부는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계획지원단(농촌계획, 산업, 관광, 지역역량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전문적인 자문을 시행하여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 ‘18년 선정 지구 10개소(기본계획 수립 완료, 사업 추진 중), ‘19년 선정지구 20개소(‘20.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등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20년 하반기에는 소기의 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경제활력 창출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강조하며

○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농촌지역에 역량 있는 민간 활동가·조직들이 육성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이를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사회적 경제 등 자립성장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사업내용
양평군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신(新)유통체계 구축
화성시	도농연계 로컬푸드 체계(딩검드리 프로젝트) 구축
횡성군	농특산물 가공·제조의 고도화를 통한 안심먹거리네트워크 구축
괴산군	비건 명품화를 위한 로컬액션플랜 구축
진천군	Green Agri-Tech ICT 미래농업 농촌재생 프로젝트
금산군	문화배달 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천안시	지역 소비시장과 연계한 선순환적 농산업 시스템 구축
고창군	지속가능한 농식품 융복합 신산업화 플랫폼 구축
남원시	균형과 상생을 위한 남원형 공동체 모델 구축
부안군	부안 Eco-농산업 공유경제 프로젝트
순창군	건강장수 100세 푸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및 액션그룹 활성화
고흥군	청년·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유자 글로벌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곡성군	곡성 디톡스 테라피 융복합산업 시스템 구축
광양시	광양 매실산업의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구례군	산수유 및 치유관광산업 성장기반 확대
나주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나주 상생푸드 선순환경제 구축
해남군	생태농업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에코푸드 시스템 구축
군위군	체류형 농촌 전원체험 벨트 구축 및 산업기반 조성
성주군	공동체 육성기반 및 지역순환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영천시	한방산업 활성화 및 힐링 관광 플랫폼 구축
울릉군	울릉 화산섬 밭농업 산업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울진군	미식1번지 비즈니스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청도군	농업·농촌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공동비즈니스 모델 구축
거제시	거제 아열대 특화자원기반 지역 활력 플랫폼 구축
거창군	지역 특화자원 공유시스템 구축
남해군	농축산물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밀양시	지속가능한 농촌,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양산시	푸드테크를 통한 도농 UP! 행복 양산
창녕군	공동체중심 창녕 에코푸드 거점 및 산업기반 구축
합천군	농촌 힐링자원 융복합 지원체계 및 맞춤형 힐링산업 모델 구축

* 상기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정(농식품부 협의)에서 변경 가능

□ (목적)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성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

○ 특히,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지원한 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커뮤니티 활성화, 역량배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촌혁신 창출

* 지원근거: 군특법 제10조(생활기반확충과 지역발전역량강화), 삶의질 특별법 제38조(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및 제72조(생활환경정비 및 농어촌산업 육성)

□ (지원 내용)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에서 수립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개소당 4년간 70억원: 국비 49억원, 지방비 21억원)

○ 단, 총사업비 30% 이상은 지역 내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민간조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지원

* ('18~'19년 지구) 1년차 10%, 2~4년차 각 30% / ('20년 지구) 1년차 20%, 2~3년차 30%, 4년차 20%

□ (사업대상 시군)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중 공모를 통해 선정

○ '20년 신규지구는 기 선정된 30개 시군('18. 10개, '19. 20개)을 제외한 9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30개 시군 선정

<2020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선정 (10개 시군)	2019년 선정 (20개 시군)	2020년 선정 (30개 시군)	합계
국 비	14,700	29,400	29,400	73,500
지방비	6,300	12,600	12,600	31,500
합 계	21,000	42,000	42,000	105,000

* '18년 지구: 3년차 사업비(지구당 21억원), '19년 지구: 2년차 사업비(지구당 21억원), '20년 지구: 1년차 사업비(지구당 14억원)

고농도 계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확대

- 도로 미세먼지 저감 확대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전국 330개(1,732km) 지정 -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하나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확정·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도로 미세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인하여 날리는 먼지이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_{2.5}) 총 배출량(10만 427톤)의 약 7%(7,087톤)를 차지한다.
※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집중관리도로(약 5~10km 내외)를 지정하여, 전국 총 330개, 1,732km를 지정했다.
-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 또한,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주요 유입원(건설공사장 등)을 파악하여 발생억제를 위한 적정 조치(세륜시설 운영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 도로청소차 종류 >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누리집(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 시행 준비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는 올해 12월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 운영을 확대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현황.
2. 질의응답. 끝.

구분	선정 도로 수	총 연장(km)
합계	330	1,732.2
서울특별시	41	157.9
인천광역시	18	63.5
부산광역시	25	119.2
대구광역시	16	40.3
광주광역시	6	33.9
대전광역시	5	32.6
울산광역시	6	49.4
경기도	73	405.6
강원도	16	94.6
경상북도	27	175.4
경상남도	34	181.5
전라북도	26	111.6
전라남도	3	15.0
충청북도	17	104.3
충청남도	14	122.7
제주도	2	14.8
세종특별자치시	1	10.0

① 겨울철 살수차 운영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과 물청소를 병행하되,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는 제외함

② 일부 도로청소차를 보유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 해당 지역의 교통량, 주변인구 등을 고려하여 집중관리도로 선정 의무를 면제하거나(산간, 도서지역 등), 도로청소차 확보 계획(구매, 임차 등)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임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얼마일까?

-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 광역 시도별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표이다.

* 24개 세부 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지표별 추세를 고려한 2023년 추정값 중 최대치)을 100점으로 설정하여 해당 연도에 도달한 정도를 점수화함

<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세부 지표 >

영역(배점)	세부 지표
일 (22.1점)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 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30.1점)	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 시간 ⑥평일 여가 시간 충분도 ⑦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제도 (25.0점)	①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지자체 관심도 (22.8점)	①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③담당 조직 유무 ④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상담, ⑤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0.1점으로 2017년(37.1점) 보다 평균 13.0점 높아졌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년도에 비해 높아져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 전국 광역시도별로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부산시, 서울시, 충청북도, 세종시, 전라북도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개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지수 >

		계 (100.0점)	일 (22.1점)	생활 (30.1점)	제도 (25.0점)	지자체 관심도 (22.8점)
	전국 평균	50.1	13.1	14.9	11.5	10.6
1	부산시	57.5	13.0	15.0	11.7	17.8
2	서울시	57.1	15.4	14.3	18.4	9.0
3	충청북도	53.2	13.7	14.7	11.4	13.4
4	세종시	51.9	14.1	15.4	14.6	7.8
5	전라북도	50.2	11.1	16.9	9.6	12.6
6	전라남도	49.8	14.0	14.6	10.9	10.3
7	강원도	49.7	15.1	14.5	10.2	9.9
8	광주시	49.3	11.5	16.0	9.6	12.2
9	경기도	49.2	13.6	13.2	10.7	11.7
10	대전시	49.1	14.7	16.0	12.5	5.9
11	경상북도	48.9	12.9	14.2	10.1	11.7
12	대구시	48.8	13.2	14.7	10.0	10.9
13	충청남도*	48.5	13.9	14.7	12.1	7.8
14	인천시*	48.5	12.9	14.1	10.3	11.2
15	울산시	47.9	10.1	14.7	12.1	11.0
16	제주도	47.5	13.0	14.7	10.7	9.1
17	경상남도	44.7	11.3	14.5	10.5	8.4

* 충청남도와 인천시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차이

-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 근로시간, 휴가 사용 등 ‘일 영역’에서는 서울시(15.4점), 강원도(15.1점), 대전시(14.7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사 분담, 여가 사용 인식 등에 대한 ‘생활 영역’은 전라북도(16.9점), 광주시(16.0점) 등이 우수했다.
 -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을 나타내는 ‘제도 영역’은 서울시(18.4점), 세종시(14.6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 자치단체의 노력을 나타내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부산시(17.8점), 충청북도(13.4점), 전라북도(12.6점) 순으로 높았다.

- 지난해와 비교하여 향상된 정도를 살펴볼 때 충청북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시, 세종시, 광주시 순이었다.

< 17개 광역시도별 일·생활 균형 지수 증가 >

		증가 지수(점)	2017년 지수(점)	2018년 지수(점)
	평균	13.0	37.1	50.1
1	충청북도	18.4	34.8	53.2
2	부산시	18.0	39.5	57.5
3	세종시	15.7	36.2	51.9
4	광주시	15.1	34.2	49.3
5	전라남도	14.6	35.2	49.8
6	서울시	14.0	43.1	57.1
7	충청남도	13.7	34.8	48.5
8	강원도	13.3	36.4	49.7
9	전라북도	12.8	37.4	50.2
10	인천시	12.4	36.1	48.5
11	경상북도*	12.3	36.6	48.9
12	대구시*	12.3	36.5	48.8
13	경기도	12.0	37.2	49.2
14	대전시	10.7	38.4	49.1
15	제주도	10.4	37.1	47.5
16	울산시	9.7	38.2	47.9
17	경상남도	7.0	37.7	44.7

*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차이

- 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 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인력의 활용 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일하는 방식과 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 인식·실태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
→ 일·생활 균형 지수를 개발·산출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현황 및 일·생활 균형 개선 정도 파악 필요

□ 지수 개발 및 구성

- 201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지수 개발 및 매연도 산출
* 전문가 조사·자문회의·검증, 지자체 담당자 의견 수렴 등 진행
- 일·생활 균형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4개 영역(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24개 지표로 구성
* 영역과 영역별 세부 지표에 적용된 배점은 계층분석법(각 항목 간 중요도에 대한 상대비교)에 따른 전문가 조사(20명 대상)를 통해 산정

영역(배점)	세부 지표
일 (22.1점)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30.1점)	①남성 가사 노동시간 비중, ②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 시간, ⑥평일 여가 시간 충분도, ⑦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제도 (25.0점)	①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지자체의 관심도(22.8점)	①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③담당 조직 유무 ④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상담,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 지수 산출

- 지역별 일·생활 균형 세부 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에 현재 도달한 정도를 종합하여 산출
* 최근 추세 분석을 통한 2023년 추정값(지역별 세부 지표 추정값 중 최대치)을 100점으로 하여 세부 지표별 기준값 설정
** (참고) 2018년 지수 전국 평균은 50.1점으로, 이는 현재 기준점(2023년)에서 50.1% 도달한 상태이며 각 지역에서 연평균 약 10점을 상승시켜 최상위 지역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23년에는 100점에 도달할 수 있는 점수를 의미

영역		지표명	자료원	기준값	비고
일 (5개)		총근로시간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보고서 (세종, 충남 통합)	150시간	1,800시간/12개월
		초과근로 시간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보고서 (세종, 충남 통합)	2.0시간	2023년 추정값
		휴가기간(1년간 사용한 휴가기간)	국민여가활동조사	15일	2017년 근로자 평균연차 휴가부여일수(15.1일)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36.4%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21.6%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생활 (7)	가족 (4개)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생활시간조사(공표주기 5년)	0.5	남성 가사노동시간 /전체 가사노동시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홀수해)	81.2%	2023년 추정값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짝수해)	74.1%	2023년 추정값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사회조사(홀수해)	12.5%	2023년 추정값
	여가 (3개)	여가시간(평일)	국민여가활동조사	5.69시간	2023년 추정값
		여가시간 충분도(평일)	국민여가활동조사	100점	7점 만점 기준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국민여가활동조사	10.0%	2023년 추정값
제도 (7개)		여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고용보험DB	2.60%	2023년 추정값
		남성 육아휴직 이용(시행기업)	고용보험DB	0.59%	2023년 추정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행기업)	고용보험DB	0.37%	2023년 추정값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시행기업)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9.4%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보육통계	25.6%	2023년 추정값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학교알리미	24.9%	2023년 추정값
		일·가정양립 제도 인지도	사회조사(홀수해)	81.6점	2023년 추정값
지자체 관심도 (5개)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	-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19.9점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담당조직 유무	시도 홈페이지(조직도) 및 관련 자료	1.1점	담당조직 형태 만점(1점)+ 관련 조직 5개
		일 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세종, 충남 통합)	13.8%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8년 최대값의 15% 가산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 등	28.06개 인구 천 명당	2023년 추정값

양육비 이행사례를 한 눈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201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및 웹툰 제작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들의 사례를 모은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

- 사례집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자녀 양육책임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누리잡지(웹진) ‘행복플러스’ 등을 통해서도 소개된다.

- 이번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지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면접교섭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이용 사례가 담겼다.

- 특히, 조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건 완화로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 이후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웹툰으로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잡지(웹진) 등을 통해 배포한다.

*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 작년 32.3%에서 올해 35.4%까지 증가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 “이번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1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2건)
2. 201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 웹툰

1.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 연계를 활용한 양육비 추심지원 사례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가 양육비 지급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사례자 정보

- 신청인(양육자) N씨,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
- 기본정보 : 자녀 1명, 재판상이혼
- 특이사항 : 신청인(양육자) N씨는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으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 신청동기

-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는 재판상 이혼 당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50만 원씩 자녀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하기로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음
- 신청인(양육자) N씨는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이었으며, 한국어를 못해
일상생활과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공장근로자로 소득이
매우 낮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지원내용

- 다누리콜센터(☎1577-1366)의 24시간 다자간 통화 및 통역 서비스를 연
계해 신청인(양육자) N씨가 모국어로 양육비 상담 실시
-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의 직업, 재산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양육비 이행을 촉구. 이후 법원의
감치결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음
- 양육비 이행 후 피신청인(비양육자) C씨는 자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음

□ 양육비이행현황

- 매월 100만원 씩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고, 현재 3회에 거쳐 양육비
300만 원을 이행함

“10년 넘게 키운 손주의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 사례자 정보

- 신청인(양육자) K씨,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
- 기본정보 : 자녀 1명, 협의이혼 후 자녀의 친부(양육자) 사망
- 특이사항 : 사망한 아들 대신 고령의 조부가 손주를 대신 양육함

□ 신청동기

- 신청인(양육자) K씨는 만79세의 고령자로 무직인 상태로 손주를 양육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그러나 친모인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는 친조부인 신청인(양육자) K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

□ 지원내용

- 신청인(양육자) K씨는 실질적 양육자이지만 조부모는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청구를 할 자격이 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가 자녀의 1순위 부양 의무자인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친조부인 신청인(양육자) K씨에게 본인의 자녀를 10년 넘게 양육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 심판 청구함
- 법원은 실질적 양육자인 신청인(양육자) K씨가 지출한 양육비를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가 일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신청인(양육자) K씨가 법률상 양육비 청구인 자격은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손주를 양육했던 사실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조정함

□ 양육비이행현황

-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가 신청인(양육자) K씨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합한 총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조정, 이에 피신청인(비양육자) P씨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음

□ 웹툰명 : 양육비는 부모사랑의 시작입니다.

1.



2.



3.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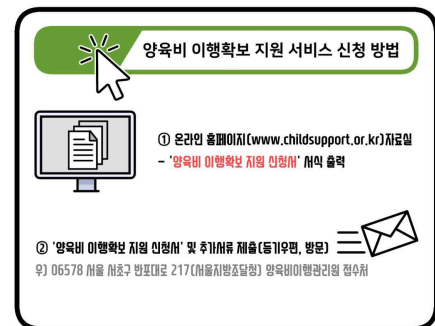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안산, 울산, 완주·전주, 삼척 친환경 미래수소도시로 도약한다.

- ' 20년 상반기 기본설계 착수, ' 22년까지 수소도시 조성완료키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가나다 순)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 산업 및 혁신기술육성 등을 접목한 특색 있는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 수소 R&D특화도시로 선정된 삼척은 국산화 기반의 수소타운 기반시설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지로서 육성될 계획이다.
- 시범사업 대상지는 10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1차 평가)·현장실사·서면평가(2차 평가)의 과정을 거쳐 계획 적정성, 실현 및 확장가능성,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 ① 안산시는 노후화로 쇠퇴해 가는 산업단지를 수소생산 및 연관산업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조력발전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을 통해 수도권의 친환경 도시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 ② 울산광역시는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수소타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도심 내 건물과 충전소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배관망을 구축하고 수소 지게차, 선박용 수소충전 실증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세계적인 수소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 ③ 완주군·전주시는 완주군은 수소생산 공장 및 광역공급 기지로, 전주시는 수소이용도시로 기초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전주시는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홍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④ 삼척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를 개발하는 실증지로서 관련 국산기술개발의 선도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가R&D사업에 수소드론 등 지역특화산업과 혁신산업을 연계해서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소 도시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20년 하반기 이후부터 배관설치 등 조성공사에 착수해서 '22년까지 수소도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도시는 통합운영관리센터 운영과 자동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관리와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종합계획수립 등 모든 단계별로 안전성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하여 지자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김남균 과장은 “이번 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선정은 미래청정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세계 최초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술의 세계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사업개요	기본 개념도
안산시	글로벌 수소도시, ECO 안산 ○ 기본요소 -(주거) 경기행복주택 232세대, 제조혁신창업타운 등 -(교통) 수소충전소 3개소, 수소버스 2대, 수소지게차 10대 등 -(인프라) LNG추출기 1기, 수소배관 8km 신설 등 ○ 특화요소 : 조력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수소선박 등	
울산광역시	수소경제산업 기반의 깨끗하고 행복한 H2appy 수소도시 조성 ○ 기본요소 -(주거) 공공임대주택 373세대, 국민임대주택 437세대 등 -(교통) 수소 시내버스 10대, 수소 시티투어버스 1대 등 -(인프라) 수소배관 10km 구축 등 ○ 특화요소 : 수소지게차, 수소연료전지 선박, 수소유람선 운영 등 지역특화사업 연계	울동 수소시범도시 주거모델 종합 구상도

지자체	사업개요	기본 개념도
완주군 전주시	지역맞춤형 수소기반 도시 생태계 구축 및 확산 o 기본요소 -(주거) 공동주택 408세대,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 -(교통) 수소버스 49대, 수소셔틀·테마버스 3대 등 -(인프라) 충전소용 파이프라인 750m, 연료전지용 파이프라인 3km 등 o 특화요소 : 수소운송용 고압용기, 수소저장용기, 수소홍보관 등	
삼척시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의 거점 도시관광 복합형 수소도시 조성 o 기본요소 -(주거) 공동주택 442세대, 기숙사 3개동 368실 등 -(교통) 수소 시내·시외버스 2대, 수소자전거 10대 등 -(인프라) 액체수소 충전트럭, 수소충전소 및 생산시설 구축 등 o 특화요소 : 에너지자립형 수소주택단지, 액화수소 생산 실증, 수소드론 체험관 등	

수산물 위생·안전 매뉴얼 만든다

-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매뉴얼, 전통시장 수산물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매뉴얼’과 ‘전통시장 수산물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은 다른 식품에 비해 쉽게 부패될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 위판장부터 소비지 전통시장까지 수산물 유통·판매 시 점검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매뉴얼’은 유통단계별로 ▲산지위판장, 도매시장의 양륙장, 선별·경매장, 하역장 등 작업구역에서의 위생·온도 관리사항 ▲제·저빙시설 및 냉장·냉동창고 운영기준 ▲냉동·냉장차량 운영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매뉴얼’은 수산물의 처리·포장·보관·판매와 작업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중심으로 ▲개인위생관리 ▲도구관리(진열대·수족관·칼·도마 등) ▲작업관리(보관·저장·진열·손질) ▲환경관리(점포관리·

용수·폐기물) 방법들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국민 생각함(idea.epeople.go.kr)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1월 중 최종 확정된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유통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매뉴얼을 리플릿 형태로도 제작하여 수산물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 2종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